



G20, IMF 재원확충 3월로 연기

이혜은 연구원

■ G20는 2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 기금(IMF) 재원확충에 앞서 3월 유럽연합(EU)의 자구 노력을 먼저 점검한 후 재원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함.

- G20는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, 영국 등 영·미권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함.
- 유럽이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먼저 행동을 보여야 다른 국가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데는 합의하고 3월 초 EU 정상회의에서 EFSF와 ESM의 적정 규모를 평가한 뒤 IMF의 재원 증액 규모를 논의할 계획임.
 -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“IMF 재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유럽의 위기를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으며, 일정기간 개혁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을 버텨낼 수 있는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말하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 마련을 촉구함.
 - 일본 또한 글로벌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유럽의 책임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IMF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.

■ IMF 재원확충은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‘양자차입(bilateral loan)’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는 데 합의함.

- 이는 다만 IMF가 회원국들이 일정 비율로 자금을 출현해 만드는 쿼터 기반 기관이며, 확충되는 재원은 이를 일반계정에 편입시키고 IMF에서 유로존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정책이행에 대한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.
- IMF의 대규모 차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.

- 우리 정부와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공화국,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요청으로 IMF 특별인출권 (SDR)을 신규 배분하는 방식도 재원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함.

■ 또한 G20는 회원국 간 재정·금융·구조개혁·통화·개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.

-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한 새로운 경제·금융정책 감시체제를 마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, 4월 IMF 춘계총회와 G20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임.
- 이 외에도 G20는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함.
 - 이는 금융규제 강화로 선진국 금융기관이 자본 확충을 위해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갑자기 회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조치임.

(Financial Times 등, 2/26)